



기후변화협약과 정부의 정책 방향

서 기 응

산업자원부 기후변화대책팀 사무관

교토 의정서 발효의 의미

금년 2월 16일에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국제 규범인 기후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활동이 본격화 된다. 우리나라는 당장에는 구속적인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은 없으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또한 대외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응이 시급하게 되었다.

게다가 금년중 2013년 이후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의무 부담 협상이 시작된다.

현재 세계 9위 온실 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경제 및 산업 활동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94% 이상의 온실 가스가 에너지(83.4%)와 제조 공정

(10.9%)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무 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이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 할 수도 있다.

또한 선진국은 의무 부담에 따른 자국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 규제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 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선진국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토 의정서 발효가 우리 경제와 산업 활동을 위협하는 도전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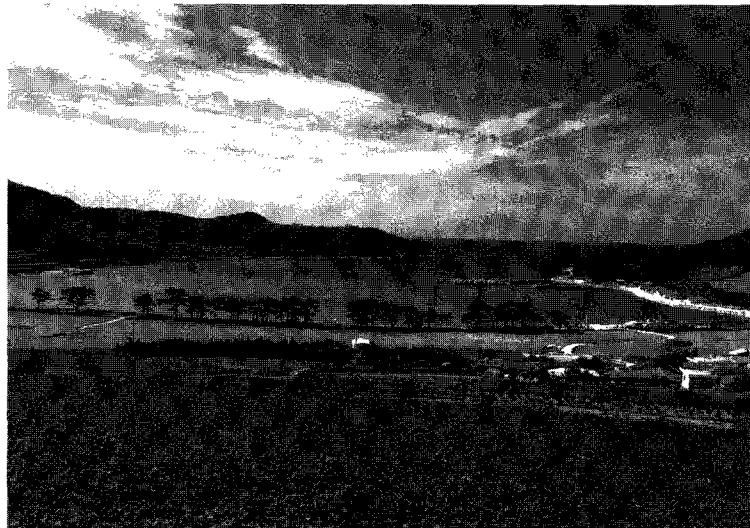
지금까지도 정부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의 의무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협상력을 키우고 대내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여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먼저 기존 화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 대안으로 수소 경제 혁명이 진행중인데 이에 대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3년 말 2.1%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에는 5%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용화·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인 수소 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급을 위해 발전 차액 지원, 공공 기관 신재생 에너지 구매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2004년 12월에 수립한 「에너지 원 단위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5년부터 3년 동안 에너지 소비 효율을 8% 이상을 개선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을 2005년 말까지는 1,200개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냉·난방 에너지 효율 및 가전 기기의 효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효율 등급제 시행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온실 가스 배출이 적은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가 필요하다.

프랑스·일본·미국·중국 등은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발표(2005. 4. 27) 한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선언하였다.

1970년 이후 원전 신규 건설이 전무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말에 수립한 제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004~2017)에 따라 원자력의 적정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 건설 할 계획이다.

지역 난방, 소형 열병합 발전 등 집단 에너지의 보급도 활성화할 계

획이다.

금년 중 소형 열병합 발전 보급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 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비축 시설 및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다.

차기 의무 부담 협상 대비 및 협약 이행 기반 구축

정부는 금년 중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 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협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 여건상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무 부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방식이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의무 부담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도 필요하다.

배출량, 감축 실적 등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업종별·기기별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2005년 3/4분

기 완성할 예정이다.

국가 전체의 온실 가스 배출 통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및 업종별 온실 가스 배출 통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 감축 실적의 등록·관리 체계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9개 사업장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는 감축 실적에 대한 정부 구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산업계와 소비의 주축인 국민 모두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산업계 스스로 기후 변화협약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구성한 발전·정유·철강 등 8개 업종별 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업종별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자발적인 온실 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후 변화 협약을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를 앞당기는 기회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현실적으로 주요한 온실 가스 배출 감



축 방안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결국은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교토 의정서 발효가 우리의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를 앞당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토 의정서의 발효는 한편으로는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는 탄소 배출 저감 기술력 확보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온실 가스 감축 문제는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에 닥칠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정부·기업·국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 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기후 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파고에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를 하루 빨리 정착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